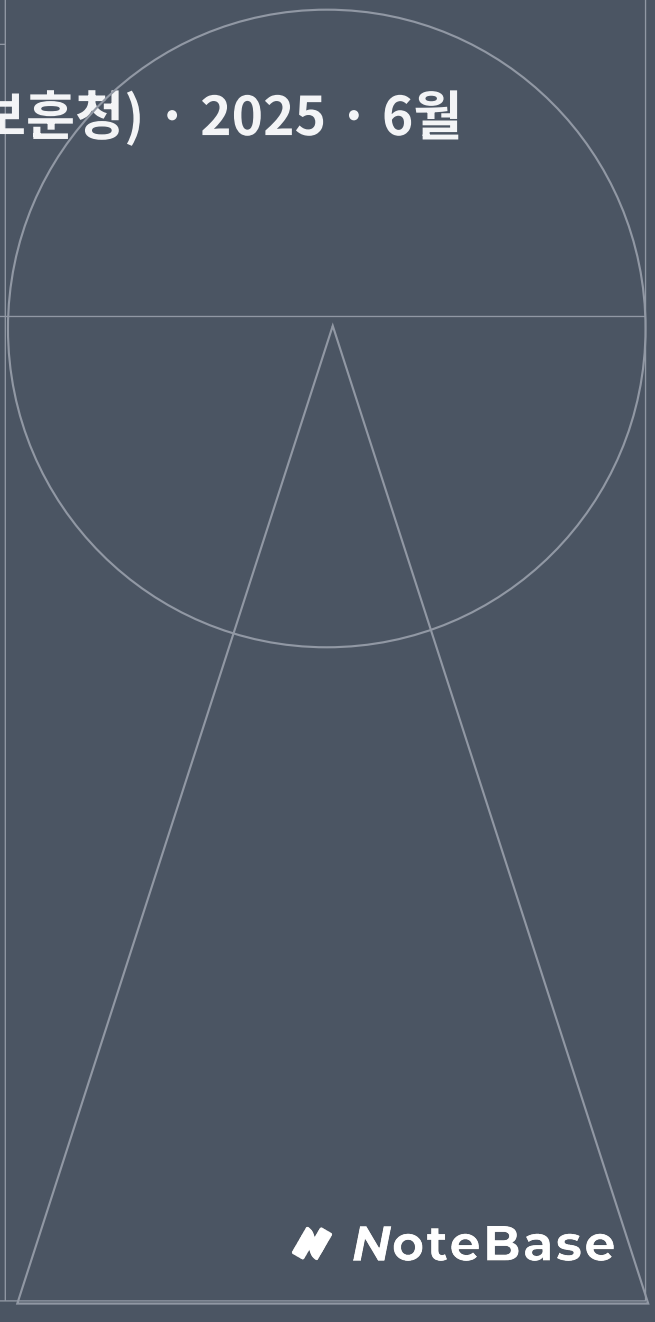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보훈청) · 2025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보훈청) · 2025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보훈청) · 2025 · 6월

문 1. <보기>에서 설명하는 일탈 이론은?

<보기>
일탈과 같은 사람들의 행동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학습한 결과라고 본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일탈 행동이나 범죄는 보편적인 사회 규범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한 결과인 '사회화 실패의 산물'이 아니라 특정한 규범이나 태도를 자연스럽게 학습한 결과, 즉 정상적인 사회화의 산물이 된다.

① 낙인 이론
② 차별 교제 이론
③ 머튼(Merton)의 아노미 이론
④ 뒤르켐(Durkheim)의 아노미 이론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일탈도 다른 사람과의 교류 속에서 **규범과 태도를 학습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차별 교제 이론이다. 보기의 핵심은 사회화의 실패가 아니라 일탈을 허용하는 규범을 배우는 사회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공통 해설

차별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도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고 본다. 일탈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일탈에 필요한 방법뿐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태도와 규범도 배우게 된다는 설명이다.

보기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학습하고, 특정한 규범이나 태도를 자연스럽게 습득한 결과로 일탈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는 차별 교제 이론의 학습 관점에 해당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사회화의 산물'이라는 말은 **학습과 사회화의 과정으로 일탈이 형성된다**는 뜻이며,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2. <보기>에 나타난 연구의 문제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은 자신이 발견한 유산균의 장내 유익균 증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험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였다. 갑은 실험 참여자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한 뒤 한 집단에게만 새로 발견한 유산균을 섭취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의 장내 유익균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갑은 유산균을 섭취한 그룹원 중 유익균 증진 효과를 보이지 않은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제외한 후 비교하였고, 유산균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었다.

① 비윤리적인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
② 연구 대상에게 연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였다.
③ 수집한 자료를 연구 외의 목적을 위하여 유출하였다.
④ 연구 결과를 의도대로 얻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갑은 유산균의 효과를 보이지 않은 참가자들의 자료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임의로 제외**하였다. 이는 실제 분석 결과를 왜곡하는 자료 조작으로,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유산균의 장내 유익균 증진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주제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제시된 문제는 주제 선정이 아니라 **자료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② O: 갑이 연구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참여자를 모집했으므로 사전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참여자가 연구 내용을 알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는 **연구 윤리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연구의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X: 수집한 자료를 연구 외의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료 유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문제는 연구 외 목적의 유출이 아니라 **불리한 자료를 제외하여 결과를 왜곡한 행위**이다.

④ O: 처음에는 두 집단 간 장내 유익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갑은 유산균을 섭취하고도 효과를 보이지 않은 참가자들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이는 원하는 결론에 맞추어 자료를 선택적으로 남겨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만든 **자료 조작**이다. 연구자는 효과 유무에 따라 자료를 임의로 제외하지 않고, 수집한 자료와 분석 결과를 정직하게 보고해야 한다.

NoteBase

문 3.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정부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 정책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특정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 ㉡ 정부 혁신 어워드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혁신 사례를 평가하여 우수한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홍보하는 제도이다.
· ㉢ 국민 정책 제안은 국민이 특정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는 제도로,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정부가 공식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 ㉣ 국회 청원 심사는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① ㉠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 ㉢은 산출에 해당한다.

② ㉡은 ㉢과 달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제도이다.

③ ㉢과 ㉣ 모두 국민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 방식이다.

④ ㉢과 달리 ㉣은 시·공간의 제약을 완화하여 정치 참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의 정책 제안은 정부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률 제·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고, ㉣의 청원은 국회의 법안 발의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 다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여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정치 과정에서 투입은 국민의 요구나 지지가 정치 체계에 전달되는 것이고, 산출은 정책 결정이나 집행 등 정치 체계의 대응이다. ㉠에서 국민이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은 투입에 해당한다. ㉢에서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활동도 **산출이 아니라 투입**이다. 정부가 제안을 검토한다는 사실과 국민이 제안을 제출하는 활동을 구별해야 한다.

② X: ㉡은 공공기관이 추진한 혁신 사례를 평가·선정하고 홍보하는 제도이다. 제시문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없다. 반면 ㉢은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공감을 모아 정부의 검토를 이끌어 내는 참여 방식이다. 시민의 직접 참여라는 특징은 ㉡보다 ㉢에 부합한다.

③ O: ㉢은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정부의 공식 검토 대상으로 만드는 제도이다. 제안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의 입법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은 국민의 청원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검토하므로 법안 발의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둘 다 국민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이다. 이는 제안이나 청원이 곧바로 법률 제·개정을 확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은 제시문에서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도 시·공간의 제약을 완화**하여 참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온라인으로 운영될 때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도, 이를 '㉢과 달리' 갖는 특징으로 구별할 수는 없다.

NoteBase

문 4. <보기 1>은 A국에서 제정된 법률 조항의 일부이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나타날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정부는 다음의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공포한다. 이 법률로 인해 정부가 헌법을 변경시킬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다.
제1조 A국의 법률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것 외에, A국의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제2조 A국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법권을 가진 다른 기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부는 이러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

<보기 2>
ㄱ. 입헌주의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다.
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어려워졌을 것이다.
ㄷ. 신속한 정책 결정이 어려워져 정책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졌을 것이다.
ㄹ.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 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통치의 합법성을 실현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부가 헌법상 절차 밖에서 법률을 의결하고 입법기관의 합의 없이 조약을 체결하면 **헌법에 의한 권력 제한과 기관 간 견제**가 약해진다.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입헌주의는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원리이다. 제1조는 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절차 외의 방법으로도 법률을 의결하도록 하고, 제2조는 조약 체결에서 입법기관의 합의를 배제한다. 이는 **헌법에 의한 권력 제한**을 약화시키므로 입헌주의에 어긋난다.

ㄴ. O: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이 법률은 정부에 법률 의결권까지 부여하고 조약 체결에 대한 입법기관의 견제를 배제한다. 따라서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어려워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ㄷ. X: 입법기관과의 합의나 심의 과정이 줄어들면 정부는 정책에 필요한 법률이나 조약을 더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정책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설명과 달리, **정책 결정이 빨라지고 수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신속한 결정이 국민의 권리 보장이나 정책의 타당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ㄹ. X: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고 상호 견제하게 하여 권력 집중을 방지하는 원리이다. 이 법률은 행정부가 입법권까지 행사하게 하고 입법기관의 견제를 약화시키므로 **권력 분립이 아니라 권력 집중**을 초래한다. 법률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과 권력 분립 원리에 부합하는 통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ㄴ이며, 이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보기>의 (가), (나)에 나타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갑(甲)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해 □□ 고등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나) 을(乙)은 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해 ○○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1학기 동안 참관하며 관찰하였다.

① (가)에 나타난 자료 수집 방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된다.
② (가)에 나타난 자료 수집 방법은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③ (나)에 나타난 자료 수집 방법은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용이하다.
④ (가)와 달리 (나)에 나타난 자료 수집 방법은 경험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는 미리 정한 문항에 여러 학생이 응답하게 하는 **질문지법**이다. 응답을 수량화하여 집단의 경향이나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기 쉬워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학생 300명에게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므로 질문지법에 해당한다. 질문지법은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문항을 제시하여 응답을 비교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쉬워 **주로 양적 연구에 활용**된다.

② X: 질문지법은 응답자가 질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여 답해야 하므로 **문맹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문맹자에게는 연구자가 말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면접법 등이 적합하다.

③ X: (나)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1학기 동안 현장에서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이러한 관찰은 행동이 이루어지는 맥락과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수집에는 질문지법**이 더 적합하다.

④ X: 경험적 자료는 실제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뜻한다. (나)에서 관찰한 학생들의 행동뿐 아니라 (가)에서 수집한 학생들의 응답도 경험적 자료이다. 따라서 **두 방법 모두 경험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나)만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NoteBase

문 6.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 하나이다.)

<보기>
□□법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법이지만,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개념이 모호하여 A에 위반되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 과도하여 B에 위배된다는 등 보완점이 제기되었다.

① A가 강조될수록 입법권이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② B는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의 수준은 비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A와 달리 B는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④ B는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형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범죄의 무거운 정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다는 뜻이다. 따라서 B는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비례 관계**를 요구하는 **적정성의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A는 범죄와 형벌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이다. B는 범죄와 형벌을 정한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맞아야 한다는 적정성의 원칙이다.

① X: A는 입법자에게 범죄의 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할 의무**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처벌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법관의 자의적 해석도 막는다. 입법권이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B는 범죄의 경중과 그에 따른 **형벌의 수준이 비례**해야 한다는 요구를 포함한다. 보기에서 형벌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처벌 수준이 범죄의 무거운 정도에 비해 지나쳐 이러한 균형이 깨진다는 취지이다.

③ X: **A와 B 모두**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한다. A는 불명확한 법률로 처벌 범위가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막고, B는 법률로 정했더라도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한다.

④ X: 행위 후 제정한 법률로 그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이는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범죄와 형벌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형벌 내용의 적정성을 요구하는 B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7. <보기>의 밑줄 친 '이 집단'은?

<보기>
이 집단은 자기가 속하거나 속하고 싶어 하는 집단으로서 남들과의 비교에 평가 기준이 되는 집단을 말한다. 이 집단을 선택할 때에는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 사회적 배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 만약 이 집단과 자신의 소속집단이 다를 경우에는 내면적으로 불안감과 욕구 불만이 생길 수 있다.

① 내집단
② 외집단
③ 준거 집단
④ 자발적 결사체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 준거 집단이다. 실제로 속한 집단뿐 아니라 앞으로 속하고 싶어 하는 집단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공통 해설

준거 집단은 개인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결정하거나 자신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다. 핵심은 **실제 소속 여부가 아니라 판단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지**에 있다. 따라서 현재 속한 집단도, 아직 속하지 않았지만 속하고 싶어 하는 집단도 준거 집단이 될 수 있다.

보기의 '남들과의 비교에 평가 기준이 되는 집단'은 이러한 준거 집단의 의미를 직접 설명한다.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다르면 자신이 바라는 기준과 현재 처지 사이의 차이를 느껴 불안감이나 욕구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이에 연결된다. 이 문항에서는 소속에 대한 감정이나 집단의 결성 방식보다 **자기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으로 집단을 식별한다.

NoteBase

문 8. <보기>는 미국 독립 선언의 일부이다. 이 선언이 로크 (Locke)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때, 그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는 다음을 자명한 진리로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신은 그들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했다. 여기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가 포함된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민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정부가 이런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인민은 언제든지 이를 변혁 내지 폐지하고, 인민의 행복과 안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이를 위한 기구를 갖춘 정부를 새로이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추구하였다.
② 국가를 생명,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았다.
③ 자연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위임될 수 없으며 변경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④ 정부가 신탁에 근거한 통치를 위반할 경우에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부의 권력은 인민의 자연권을 보호하도록 맡겨진 것이다. 정부가 이 목적을 저버리면 인민은 **신탁을 철회하고 정부를 바꿀 저항권**을 가진다는 로크의 주장이 제시문의 정부 변혁·폐지 권리와 연결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사법권을 입법권·행정권에서 분리하여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것은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에 해당한다. 로크도 권력 분립을 주장했지만, 주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강조했다. 제시문에서 로크의 영향을 보여 주는 핵심은 사법권 독립이 아니라 인민의 동의와 저항권이다.

② X: 로크에게 국가는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람들은 생명·자유·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정치 사회와 정부를 구성한다. 제시문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만든다고 하므로, 국가 자체를 목적으로 본다는 설명은 수단과 목적을 뒤바꾼 것이다.

③ X: 로크가 자연권을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로 본 것은 맞다. 그러나 자연권을 보장받는다는 것과 **그 보호·집행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각자가 행사하던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권한을 공동체에 맡기고,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자유의 행사도 보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회의 법률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정부가 자연권 자체를 마음대로 없애거나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권한의 위임과 행사 방식의 조정까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로크의 사회 계약론과 맞지 않는다.

④ O: 신탁은 인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정부에 통치 권한을 맡기는 관계이다. 로크는 정부가 생명·자유·재산을 침해하는 등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면** 인민이 복종 의무에서 벗어나 통치 권한을 회수하고 새 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 보았다. 제시문의 정부 변혁·폐지 및 새 정부 조직의 권리는 이러한 저항권을 나타낸다.

NoteBase

문 9. <보기>의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A는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하여 대중이 자발적으로 하는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싱크홀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군중들의 집단적인 행위는 A에 해당하지 않지만,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한 흑인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A로 볼 수 있다.

①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② 사회 변동으로 촉발되기도 하지만 사회 변동을 유발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③ 다수의 사람이 사회 변동을 달성 또는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행위이다.
④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가 아닌 새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사회 운동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활동뿐 아니라 **사회 변동을 저지하여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활동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 운동의 목적을 새로운 사회 질서의 형성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A는 사회 운동이다. 사회 운동은 사회 문제의 해결이나 사회 변동의 실현·저지를 목표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집단적 행위이다. 보기에서 싱크홀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군중의 행동은 일시적인 구조 활동이지만,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한 조직적인 행동은 사회적 차별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

① O: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사람들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추구하는 가치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사회 운동은 노동 운동뿐 아니라 환경 운동, 여성 운동, 인권 운동 등 **다양한 영역과 형태**로 전개된다.

② O: 사회 변동으로 새로운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 운동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사회 운동이 제도나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사회 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즉, 사회 운동은 사회 변동의 **결과이면서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O: 사회 운동은 다수의 사람이 **사회 변동의 실현 또는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적 행위이다. 변화를 추진하는 운동뿐 아니라 변화에 반대하는 운동도 포함된다.

④ X: 사회 운동을 새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려는 행위로만 보는 것은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설명이다. 사회 운동에는 기존 제도나 가치의 변화를 막아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활동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존 제도의 개편에 반대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벌이는 운동도 사회 운동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러시아의 크림반도 · 세바스토폴 점령을 규탄하고 지체 없는 군사력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A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63표, 반대 19표로 가결 처리되었다.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66개국은 기권했고 45개국은 투표하지 않았다.
• 튀르키예에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 채택을 위한 B가 소집되었지만 공동 성명 채택에는 실패했다. 대부분의 이사국이 찬성하였지만 갑(甲)국만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① A에서의 의결은 1국 1표로 표결한다.
② 갑국은 B의 상임 이사국에 해당한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A 및 B에서 선출한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④ B의 15개 이사국은 모두 A에서 2년에 한 번씩 선출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15개 이사국은 모두' 선출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되며, 총회는 **비상임 이사국만 임기 2년으로 매년 5개국씩** 선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A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이고, B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담당하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첫 자료의 전체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표결은 총회를, 둘째 자료의 거부권은 안전 보장 이사회를 가리킨다.

① O: 총회에서는 국가의 인구나 경제력과 관계없이 **각 회원국이 한 표씩** 행사한다. 이는 회원국의 주권 평등을 반영한 1국 1표 원칙이다(유엔 헌장 제18조 제1항).

② O: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거부권은 상임 이사국에만** 인정된다. 비절차적 사항에 대한 의결에서 상임 이사국의 반대는 의결을 막는 거부권으로 작용하므로, 보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갑국은 상임 이사국이다(유엔 헌장 제27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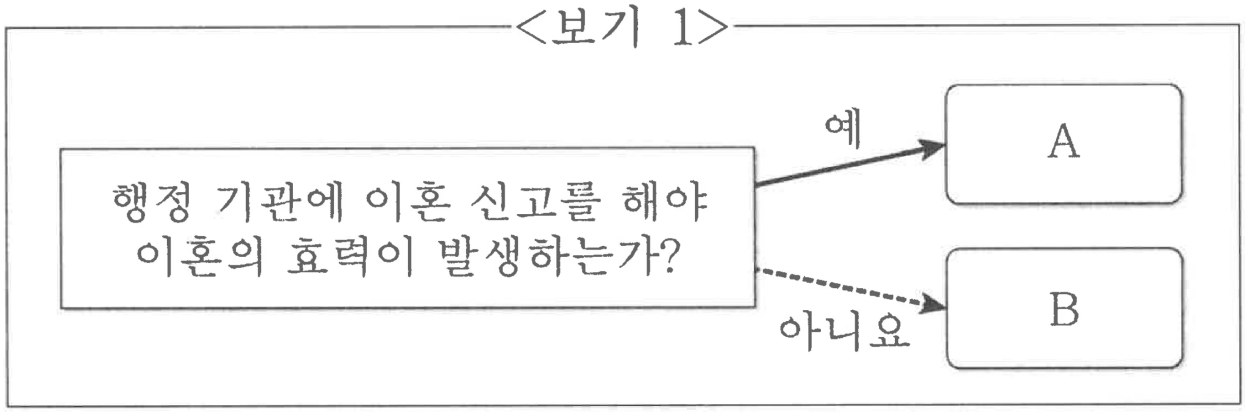
③ O: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같은 국적이 중복되지 않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투표하여 선출하므로 두 기관 모두 선출에 관여한다(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8조).

④ X: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다. 총회가 선출하는 대상은 **비상임 이사국 10개국뿐**이고,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유엔 헌장 제23조 제1항·제2항). 또한 10개국 전체를 2년에 한 번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임기가 끝나는 5개국을 대신할 국가를 선출한다(총회 의사규칙 제142조).

NoteBase

문 11. <보기 1>의 이혼의 유형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보기 2>

ㄱ. A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

ㄴ. B는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ㄷ. B는 A와 달리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ㄹ. A, B 모두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A는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협의이혼이고, B는 재판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에는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가 적용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두 유형 모두**에서 인정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보기 1>에서 '예'로 연결된 A는 협의이혼이다. 민법 제836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행정 기관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아니요'로 연결된 B는 재판상 이혼이다. 이혼판결의 확정이나 조정의 성립 등으로 이혼의 효력이 생기며, 이후의 이혼신고는 이미 생긴 효력을 기록하는 절차이다.

ㄱ. X: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 의사 합치**를 바탕으로 하므로,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는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때 요구된다.

ㄴ. O: 재판상 이혼에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이는 이혼소송에 앞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원칙이다. 조정신청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다만 공시송달 없이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ㄷ. X: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는 유형은 B가 아니라 **A인 협의이혼**이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자녀에는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되며, 폭력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는 이 숙려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O: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제843조는 이를 재판상 이혼에도 적용하도록 한다.

옳은 보기는 ㄴ, ㄹ이므로 ③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보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제29조 A는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7조 ① B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① A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A는 중앙 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④ A는 B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B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하는 **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A는 보기의 제29조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지방자치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므로, A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O: B는 보기의 제47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하는 지방의회이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은 지방의회에 **행정 사무 감사권**을 부여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살펴 집행기관을 감시·통제한다.

③ X: 지방자치단체장인 A는 자치 사무뿐 아니라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도 수행한다**. 「지방자치법」 제115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X: 예산에 관한 A와 B의 권한을 서로 바꾸어 서술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인 A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심의·확정하는 기관은 지방의회인 B**이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빈곤선은 빈곤한 상태와 빈곤하지 않은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선이다. 빈곤의 유형은 빈곤선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적 빈곤은 _____(가)_____(으)로 판단하며, _____(나)_____에 미달할 경우 상대적 빈곤에 속한다고 본다.

① (가): 중위 소득, (나): 최저 생계비
② (가): 평균 소득, (나): 중위 소득의 50%
③ (가): 최저 생계비, (나): 중위 소득
④ (가): 최저 생계비, (나): 중위 소득의 5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비교하며, 이 문항의 기준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이다.

빈칸별 해설

(가) 최저 생계비: 절대적 빈곤은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최저 생계비는 이러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이므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지**로 절대적 빈곤을 판단한다.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은 사회 구성원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므로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비용과는 구별된다.

(나) 중위 소득의 50%: 상대적 빈곤은 같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하여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중위 소득은 소득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으로, 전체 소득을 인원수로 나눈 평균 소득과 다르다. 이 문항에서는 **중위 소득의 50%에 미달**하면 상대적 빈곤에 해당한다. 따라서 빈곤선은 중위 소득 자체가 아니라 그 절반이다.

(가)는 최저 생계비, (나)는 중위 소득의 50%이므로 ④의 짝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보기 1>의 범죄의 성립 요건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려면 형법에서 범죄로 정해 놓은 일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함을 의미하는 A가 인정되어야 한다. 어떤 행위에 A가 인정되면 B가 있다고 추정된다.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이라는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B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A, B가 모두 인정되는 행위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행위에 대한 C가 인정되어야 한다.
<보기 2>
ㄱ. 12세인 자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는 절도죄의 A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C는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
ㄷ. A가 인정되는 행위라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구 행위에 해당하여 B가 조각된다.
ㄹ.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B가 인정되나 C가 조각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책임(C)은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적법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행위의 위법성(B)은 인정되어도 **책임이 조각**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A는 행위가 법률에 정해진 범죄의 요건에 들어맞는 '구성요건 해당성', B는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어긋난다는 '위법성', C는 행위자를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는 '책임'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되지만, 정당방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ㄱ. X: 12세인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도 절도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다만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A가 아니라 **책임(C)**이다.

ㄴ. O: 책임(C)은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거나 적법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X: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B)이 조각된다. 자구행위는 형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정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때,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다. 따라서 '자구 행위'를 '정당방위'로 고쳐야 한다.

ㄹ. O: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되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의 위법성(B)은 인정되지만, 그 상황에서 적법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행위자에게 **책임(C)을 물을 수 없다**.

옳은 보기는 ㄴ, ㄹ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보기>의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甲), 을(乙)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 요즘 취업을 위한 자격 조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이는 부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 조건을 통제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야.
을: 정보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따라서 취업 조건이 강화되는 경향은 사회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한 거야.

① 갑의 관점은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② 을의 관점은 사회 변동보다 사회 안정을 강조한다.
③ 갑의 관점은 행위자의 주체적 능동성을 강조한다.
④ 을의 관점은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본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을은 취업 조건의 강화를 사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현상으로 본다. 이는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조화를 중시하며 **사회 변동보다 사회 안정을 강조하는 기능론**의 관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갑은 부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의 우위를 유지하려고 취업 조건을 통제한다고 보므로 갈등론의 관점이다. 을은 취업 조건의 강화가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보므로 기능론의 관점이다.

① X: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하며 전체의 유지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본다. 갑의 갈등론은 이러한 균형보다 집단 사이의 지배와 불평등을 중시한다.

② O: 을의 기능론은 사회 제도와 각 부분이 맡은 역할을 통해 사회 전체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므로 **사회 변동보다 사회 안정을 강조**한다. 을이 취업 조건의 강화를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 해당한다.

③ X: 행위자의 주체적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이 관점은 개인이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면서 행동한다고 본다. 갑의 갈등론은 개인의 의미 해석보다 집단 간 권력 관계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④ X: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이므로 갑의 관점에 해당한다. 갈등론은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사회 변동의 동력으로 본다. 을의 기능론은 갈등보다 사회 구성 요소 간 조화와 통합을 중시한다.

NoteBase

문 16. <보기 1>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갑(甲)은 눈이 쌓인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과속으로 운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방법원은 갑에게 ㉡금고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하였다.

<보기 2>
ㄱ. ㉠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ㄴ. ㉡은 징역과 달리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ㄷ. ㉢은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ㄹ. ㉣은 ㉤과 달리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집행 유예 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고 유예의 효과이며, 사회 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은 **모두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법률의 명칭과 관계없이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정한 법규**를 말한다. '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만을 가리키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구별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3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형벌을 정하므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ㄴ. O: 징역과 금고는 모두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이다. 다만 징역은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지만, 금고는 **정해진 노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형법 제67조와 제68조에서 구별하는 집행 방식이다.

ㄷ. X: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다. 형법 제65조에 따라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 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갑은 집행 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은 채 2년이 지나면 금고 6월의 형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형법 제60조에 따른 선고 유예의 효과로, 집행 유예의 효과와 다르다.

ㄹ. X: 사회 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은 **모두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사회 봉사 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하게 하고, 수강 명령은 교육을 통해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 습관을 개선하게 한다. 사례의 준법 운전 강의도 잘못된 운전 습관을 고치고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과 달리'라는 구별이 잘못되었다.

옳은 보기는 ㄱ, ㄴ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①이다.

NoteBase

문 17. <보기>의 국제법의 법원(法源)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보기>

• ‘A는 국제 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이다.’라는 진술은 거짓이다.

• ‘B는 C와 달리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행위 주체들에 대하여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라는 진술은 참이다.

① 국내 문제 불간섭은 A에 해당한다.

② 국제기구는 C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③ B는 A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④ A~C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여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 관습법**이다. 보기에서 A는 법의 일반 원칙이 아니며, 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속하는 C가 조약이므로 A가 국제 관습법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법의 일반 원칙은 여러 나라의 법체계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법 원칙이다. 첫 진술이 거짓이므로 A는 법의 일반 원칙이 아니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를 구속하지만,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원칙적으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두 번째 진술에서 C는 조약이고, 남은 A는 국제 관습법, B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① O: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제 관습법인 A**에 해당한다. 국가는 주권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치·경제 체제 등의 문제에 관하여 다른 국가의 강제적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불간섭 의무는 국가들의 일반적 관행이 법적 의무라는 인식과 결합하여 인정된 국제 관습법이다.

② X: C는 조약이며, **국제기구도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국제기구는 그 기구의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조약 체결 능력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다른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X: B인 법의 일반 원칙뿐 아니라 **A인 국제 관습법도 재판 준거가 된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은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을 재판에 적용할 법원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A와 달리'라는 구별이 잘못되었다.

④ X: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국내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뜻이며,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준다는 뜻은 아니다. 이들은 국내 법질서에서 헌법보다 하위에 있으므로 '헌법과 동등한 지위'라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NoteBase

문 18. <보기>에서 토인비(Toynbee, A. J.)가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토인비는 인류의 문명을 분석하면서 도전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따라 흥망성쇠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문명이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성, 성장, 쇠퇴, 해체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①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다고 본다.
② 과거의 사회 변동만을 설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③ 사회 변동을 생물 유기체의 진화 과정에 비유한다.
④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문명의 생성·성장·쇠퇴·해체를 설명하는 관점은 **순환론**이다. 과거 문명의 흥망성쇠를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데 치우쳐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선지별 해설

토인비는 도전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따라 문명이 흥망성쇠하며 생성·성장·쇠퇴·해체를 거친다고 보았다. 이는 사회가 계속 발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흥망성쇠의 양상을 되풀이한다고 보는 순환론에 해당한다.

① X: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일정한 방향에 따라 발전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이다. 순환론은 발전뿐 아니라 쇠퇴와 해체도 사회 변동의 과정에 포함하므로, 사회가 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한다고 보지 않는다.

② O: 순환론은 과거 문명에서 나타난 흥망성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앞으로 어떤 사회 변동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과거의 사회 변동만을 설명한다'는 표현은 **역사적 사례의 사후 설명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뜻한다.

③ X: 사회 변동을 생물 유기체의 **진화 과정**에 비유하는 것은 진화론이다. 제시문의 순환론도 유기체에 빗대지만, 문명이 생성·성장한 뒤 쇠퇴·해체한다는 **생애 과정**에 주목한다. 따라서 유기체라는 말의 유무보다 무엇에 비유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④ X: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은 **진화론**에 해당한다. 서구 사회를 더 발전한 사회로, 비서구 사회를 뒤처진 사회로 여기면 서구의 지배를 비서구 사회의 발전을 돕는 일로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명의 흥망성쇠를 설명하는 순환론에 대한 비판과 다르다.

NoteBase

문 19. <보기 1>은 사회화의 내용 및 설립 목적을 기준으로 사회화 기관을 유형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분류 기준		사회화의 내용	
		(가)	(나)
설립 목적	(다)	A	B
	(라)	C	가족

<보기 2>

ㄱ. (가)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ㄴ. (다)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화를 담당한다.

ㄷ. A에는 직업 훈련소, C에는 회사가 들어갈 수 있다.

ㄹ. C는 기본적인 가치 및 규범 등 개인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가족은 기초적인 가치와 규범을 익히는 1차적·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므로, (가)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다)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직업 훈련소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A에, 회사는 생산·영업 활동 중 사회화가 이루어져 C에 해당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사회화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규범·지식 등을 배우는 과정이다.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 기초적인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배우는 1차적 사회화 기관과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배우는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눈다. 설립 목적에 따라서는 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다른 목적의 활동 중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눈다. 표에서 가족은 1차적·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므로, (가)는 2차적, (나)는 1차적, (다)는 공식적, (라)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ㄱ. X: (가)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가족이 속한 (나)가 기초적인 가치·규범과 생활 습관을 익히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므로, 다른 열인 (가)는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습득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ㄴ. O: (다)는 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교육 목표와 계획에 따라 지식·기능·규범 등을 가르치므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화**를 담당한다.

ㄷ. O: A는 2차적·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직업 훈련소는 직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설립되므로 A에 들어갈 수 있다. C는 2차적·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회사에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 지식과 조직의 규범을 배우지만, **설립의 주된 목적은 사회화가 아니라 생산·영업 활동**이므로 C에 들어갈 수 있다.

ㄹ. X: C는 전문적인 지식·기능이나 특정 역할의 수행 방식을 배우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기본적인 가치·규범을 익히고 자아 정체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과 같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의 특징이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ㄷ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보기 1>은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거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 기초 의회 의원 선거 중 하나이다.)

<보기 1>

질문	A	B	C
4년마다 실시하는 선거인가?	아니요	예	예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대표자를 선출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보기 2>

ㄱ. A는 절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ㄴ. B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ㄷ. B는 C와 달리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실시하고 있다.

ㄹ. B와 C 모두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B인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지역구마다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B와 C인 국회 의원 선거는 모두 비례 대표 의원을 뽑을 때 **정당에 투표하고 후보자 명부에 따라 당선인을 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보기 1>에서 4년마다 실시하지 않는 A는 임기가 5년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다. B와 C는 모두 4년마다 실시하지만, 국가의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국회 의원을 뽑는 선거는 C이다. 따라서 B는 기초 의회 의원 선거이다. 기초 의회는 법률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개정한다.

ㄱ. X: 대통령 선거는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한다. 여러 후보가 경쟁할 때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더라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를 요구하는 절대 다수 대표제와 구별된다.

ㄴ. O: 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한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다르다.

ㄷ. X: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실시하지 않는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비례 대표 의원은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출한다. C인 국회 의원 선거에서도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것은 비례 대표 의원 선거이며, 지역구 의원은 각각의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한다.

ㄹ. O: 기초 의회와 국회 모두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한다.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별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 뒤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정한다.

옳은 보기는 ㄴ, ㄹ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